

지상파 디지털 TV 채널재배치 완료 10월 16일 오후 2시 수도권-충청권-강원권

10월 16일 오후 2시 수도권-충청권-강원권 채널재배치가 전격 완료되었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은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를 기점으로 지상파 디지털 TV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6월과 7월에 이어 10월에 전국 3권역 채널재배치 사업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본 채널재배치의 영향으로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해당 지역 거주 일부 가구(약 25만2,000가구)에서 TV채널 일부 또는 전체가 안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리모컨을 이용해 수신채널을 검색해 채널을 다시 설정하면 TV를 볼 수 있다.

사실 채널재배치 사업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 TV 전환을 계획하며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에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채널재배치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및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며 해당 계획은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이에 구 방통위는 지상파 디지털 TV 전환이 종료된 후 10개월에 걸쳐 전국을 3권역으로 나누어 해당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해 가까스로 논란을 잠재웠다. 이에 10월 16일 오후 2시에 실시된 채널재배치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이 대상이었으며 이미 전라권과 경상권은 채널재배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채널재배치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논쟁의 불씨는 여전하다. 우선 시청권 보장의 문제. 이미 채널재배치 사업이 실시된 전라권과 경상권도 마찬가지지만, 본 사업의 여파로 직접 수신가구는 시청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 지역 지상파 방송 채널재배치에 대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채널재배치 이후 시청자 불편이 없도록 콜센터(124번)를 통해 신속한 민원응대를 하고, 노

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채널재설정 방법을 안내하거나 스스로 조치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채널재설정을 돕고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일시적인 장애일 뿐이라는 것에 무게가 쏠린다. 물론 DTV KOREA도 전신체제에 가까운 비상가동을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채널재배치 사업 그 자체에 있다. 우선 채널재배치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다. 3권역 채널재배치의 종료는 곧 해당 주파수의 본격적인 할당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송과 통신이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두고 서로의 신경만 건드리는 탐색전을 펼쳤지만, 이제 본 채널재배치를 통해 실존하는 '주파수'를 두고 격렬한 논리포격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가용 주파수의 무조건적인 통신 할당을 추구하는 미래부가 모바일 공개로 플랜 2.0을 기치로 10월 안에 주파수 할당을 포함한 새로운 방송기술 발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당장 현재 운용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의 여론도 돌발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채널재배치 사업에 따른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두고 해당 주파수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담보할 수 있는 방송분야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UHDTV) 발전의 용도로 해당 주파수를 활용해야 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방대한 '주파수 총량'을 가지는 통신에게는 700MHz 대역 주파수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셈이다. 즉, 이번 채널재배치 완료가 국민의 공공재인 700MHz 대역 주파수를 특정기업에 의해 민영화, 사유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4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미래부-방통위, UHD 방송 공동협의체 구성 총체적인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UHD-TV 방송 산업의 종합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 공동으로 UHD 방송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16일 오후 3시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추진 협의체는 양 기관의 담당과장과 학계·연구계, 매체별 방송 사업자, 콘텐츠 제작사, 가전사 등을 대표하는 임원급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 위원장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추천한 송도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맡아 협의체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이에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산하에 지상파 방송 분과, 유료 방송 분과, 콘텐츠 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에서 마련한 UHD 방송 발전방안을 총괄적으로 논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협의체 산하 3개 분과는 해당 분야 탐장급 전문가 약 20명으로 구성하여 주 1회 회의개회를 통해 각 분야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조직 형태는 사무처와 상임위원회로 운영되는 방통위와 비슷하다.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 김정렬 방통위 창조기획담당관,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심상민 성신여대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유세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유지상 광운대 전자공학과 교수, 박상일 서울과학기술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권순범 KBS 정책기획본부장, 유환식 SBS 기획실장, 김형준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정진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사무총장, 최정우 홈초이스 대표, 김이란 (주)스타이스트디지털 대표, 안재현 삼화네트웍스 대표, 이효건 삼성전자 TV개발실장, 황정환 LG전자 TV연구소장, 이경국 티브이로직 대표, 박동욱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실장, 채종석 ETRI 방송통신미디어연구부 문 연구소장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협의체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전문가들은 UHD-TV 발전 로드맵의 동력을 극대화시

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협의체가 정부 주도의 '유료방송 중심 UHD-TV 발전 모델'을 명확적으로 따라갈 여지가 있는 점은 불안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지상파 중심의 관련 정책입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송도균 위원장과 지상파 분과 위원장인 유세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의 인연도 눈에 들어온다. 유세경 교수는 송도균 위원장이 SBS 사장이었던 2001년과 2002년, SBS 문화재단 지원교수로 선정된 경력을 갖고 있다. 또 2008년 YTN 재승인 심사 당시에도 함께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송도균 위원장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다. 송 위원장은 최근 KT 사외이사 물망에 오르며 전형적인 '정인유착'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논란은 역시 '방송기술인'에 대한 막말 논란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08년 10월 29일 방통위 부위원장 시절 통일IT 포럼 조찬 토론회에서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더딘 이유가 방송기술인과 노조 탓이라고 비판하는 상식 밖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이던 송 위원장은 "자동차 대중화 시대에는 운전기사가 대중화 되듯 사용자 기자와 PD가 기술을 만지는 시대가 왔다"며 DTV 전송방식에 있어 "미국식이나 유럽식이나 등의 논쟁을 끝내고 지상파 DMB도 이동 수신이 가능토록 정리했는데 이를 (방송기술인과) 노조가 '지상파 DMB는 전혀 새로운 미디어라고 '시비를 걸었다'고 말했다. 방송사 노조 및 방송기술인 전체를 겨냥한 수준 이하의 '막말'을 한 셈이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당시 회장 이재명)는 2008년 11월 6일 방통위를 항의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이재명 연합회장, KBS 정호인 기술인 협회장, EBS 김남호 기술인협회장, SBS 김성훈 기술인협회 부회장과 만나 방송기술인 전원에 게 사과한 바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Photo News



긴장감이 넘쳤던 남산 송신소 현장

2013년 10월 16일 오후 2시, 전국 3권역 채널재배치가 종료되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2013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체육대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체육대회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체육대회가 10월 26일(토) 북한산에서 개최됩니다.

방송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최동환



일시: 2013년 10월 26일(토) 09:30

장소: 매미골 식당 (고양시 지축동 소재)

일정: 북한산 등반, 족구대회 및 레크리에이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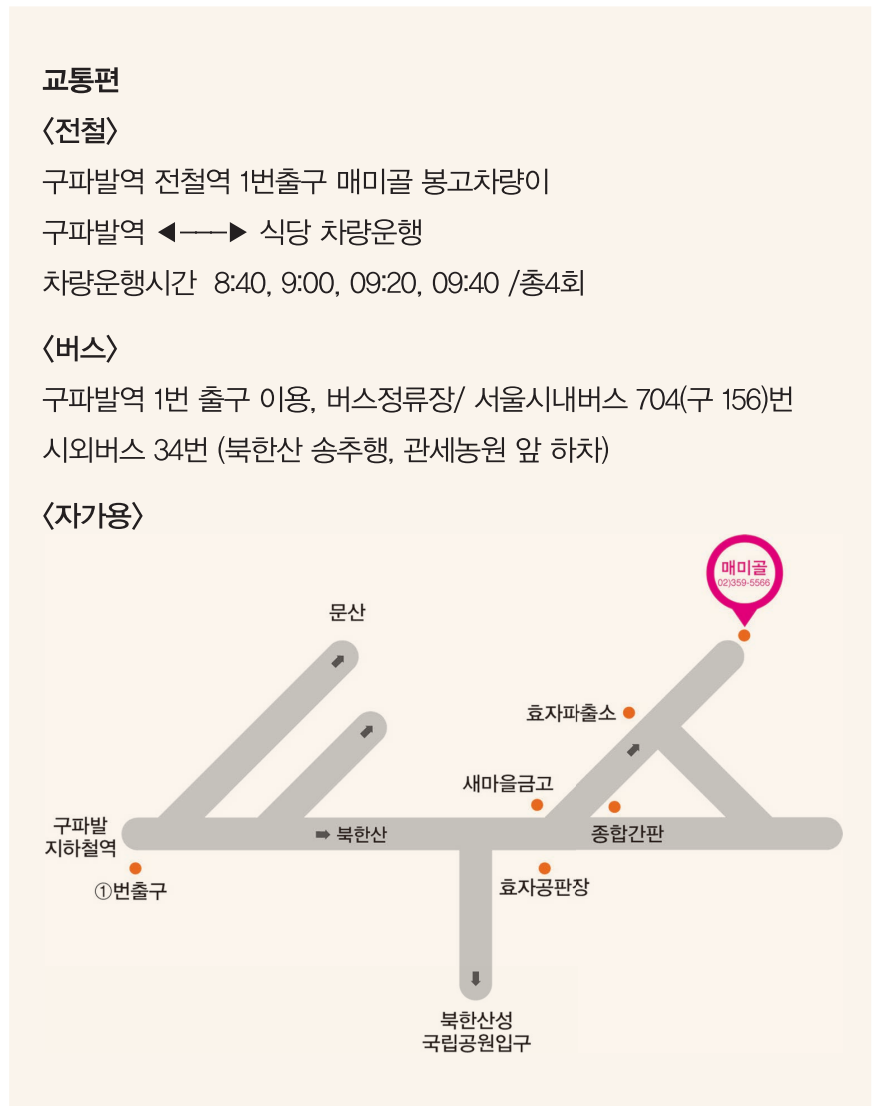
경품안내

1등 상품권 50만 원 1명

2등 상품권 30만 원 1명

3등 상품권 10만 원 2명 및 100여 품목

시간	주요내용
09:30 ~ 09:50	행사준비
09:50 ~ 10:00	개회식
10:00 ~ 12:00	북한산 등반
12:00 ~ 13:00	중식
13:00 ~ 15:00	레크리에이션
15:00 ~ 17:00	족구
17:00 ~ 17:30	시상식/경품추첨
17:30 ~	폐회식





사설

지상파 방송 채널재배치,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전국 3권역 채널재배치 종료

2013년 10월 16일 오후 2시,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 채널재배치가 방송기술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잘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의 후속조치는 잠정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전국을 3권역으로 나눈 채널재배치 사업도 끝났다.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 지상파 아날로그 TV가 종료된 후 약 10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시청자의 시청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채널재배치 작업이 무사히 완료되었지만, 아직 기뻐할 수가 없다. 직접수신가구의 시청권 문제 및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DTV KOREA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일팔의 불안요소는 남아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기본 전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 바로 '방송용 필수 주파수' 확보

채널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진정한 논란은 주파수에서 나온다. 즉, 차세대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여겨지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 논의가 이번 채널재배치 종료로 더욱 급물살을 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널재배치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주파수 할당 논쟁은 '미래의 사안'이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현재의 사안'이 되어 버렸다. 결론적으로 채널재배치 종료의 의미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여 시청자 복지를 위한 무료 보편의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는

공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의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은 물론, 해당 주파수의 할당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UHD-TV 협의체가 발족했다. 동시에 미래부는 모바일 공개로 플랜 2.0을 연내 최종적으로 수립한다는 전제 아래 당장 10월 중 주파수 수급에 관련된 중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며, 방통위는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여차피 결론은 하나다. 현존하는 가용 주파수를 모조리 빨아들이는 통신이 700MHz 대역 주파수에까지 마수를 뻗치는 것은 오만한 독선이자 추악한 욕망이며, 해당 주파수를 난시청 해소 및 UHD-TV를 비롯해 뉴미디어 발전을 위한 공공재로 활용하자는 방송의 뜻은 광범위한 지지와 동의를 받으며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채널재배치가 완료되면서 700MHz 대역 주파수는 공익을 위한 차세대 방송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주파수 대역이 되었다. 방송과 통신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해당 주파수가 더 절박한지, 그리고 누구에게 공공의 대의가 있는지 살핀다면 결론은 쉽게 도출될 것이다. 이번 채널재배치를 통해 주파수의 공공성을 둘러싼 확고한 정의가 내려지길 소망해 본다.

클리어캄 디지털 TV, 12월부터 보급 ‘홈쇼핑 채널 포함’ 놓고 여전히 논란

미래창조과학부는 저소득층도 디지털 TV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17년까지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클리어캄' 기능이 추가된 디지털 TV 보급인 만큼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미래부는 국내 TV 제조사를 상대로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 TV 선정 공모 절차를 진행해 LG전자, 삼성전자, 대우디스플레이 등의 24~42인치 크기 모델 8종을 선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쟁공모를 통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TV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LG전자와 삼성전자, 대우디스플레이 등의 국내 TV 제조사가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으로 공모에 참여해 가격을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에서 60만 원 대인 LG전자의 32형 모델을 38만9천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보급 대상은 디지털 TV를 보유하지 않은 모든 저소득층 가구지만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TV 구매는 가구당 1대씩만 가능하다.

이번 보급형 디지털 TV의 가장 큰 특징은 지상파 방송 수신기능 외에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클리어캄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급형 TV 구매자들은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TV만으로도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VOD(주문형 비디오) 등 양방향 기능은 없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클리어캄 도입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디지털 방송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양방향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 클리어캄 TV 도입을 강행했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클리어캄 TV 채널 구성이 아직 결정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 방송을 제외한 대다수의 유료방송 진영은 홈쇼핑 채널을 배제하고 의무전송채널을 포함한 19개 정도의 채널만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보편적 미디어 복지가 강화된 상황에서 굳이 클리어캄 TV 채널을 많이 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미래부가 클리어캄 TV를 도입한 것 자체가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홈쇼핑 채널까지 배정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대신 그 수신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홈쇼핑 송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의 공감을 사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미래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채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홈쇼핑 채널' 송출을 둘러싼 업계 간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백선하 baek@kobeta.com

종편, 총체적 난국에 빠지다 정리론, 퇴출론 '솔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정책적 담론을 일으킨 가운데,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내년 예정된 재승인 심사의 엄정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물론 정리론과 퇴출론까지 심상치 않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언 토론회를 열어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 정국에서 종편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다보니 실제적인 진실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한편,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종편의 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종편에 대

한 성토가 이어졌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일정상대로 보면 내년 1월 초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늦어도 3월 중순까지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종편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나왔고, 방통심의위나 방통위로부터 '경고' 등 다른 패널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그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엄정한 잣대로 종편을 평가해야 하며, 그 대상을 미리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에 제한 없이 잣대에 따라 퇴출 기준이면 퇴출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토론회를 연 주최측에서는 TV조선의 경우 공정정보특별위원회, 소셜미디어에디터, 오디오스에디터, 제작자방송평가위원회를 당초 약속한 수준 만큼 이행하지 않았으며 JTBC는 공정정보위원회를, 채널A는 막달 3진 아웃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방통위가 TV조선만 공정정보 특별위원회 도입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여기에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PP와 지상파를 오가는 종편

의 이중적 지위에 근본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며 방송기술 및 기타 다양한 영역에서 종편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및 유사보도 편성 비율이 평균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TV조선의 경우 15건의 프로그램 중 보도 프로그램이 10건, 유사보도 프로그램이 4건으로 비중이 93%에 이르고 MBN은 13건 중 8건이 보도 프로그램, 4건이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비중이 92%였으며, 채널A는 13건 중 보도 프로그램 5건, 유사보도 프로그램 6건으로 비중이 8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노 의원은 내년 3월 종편의 재허가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제로 "종편 3사는 지난 7월 사업계획서에 비해 보도 프로그램을 과다하게 편성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최근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고 있다"며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하도록 한 방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법원, “강압은 인정, 하지만 논란은 끝” 김지태씨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소송 항소심 패소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한 김지태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씨의 장남 영구(75)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104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속된 김씨가 수감이나 포승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인과 면회한 점, 부산교도소 병동에 특별 대우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의사 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어서 증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박의 정도는 증거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김씨의 증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증여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이 강압에 의한 헌납을 인정하면서도 그 강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박탈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린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제척 사유가 지났다는 것 역시 최근 행해지는 법원의 판결과 정반대 분위기다. 진실화해위가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으며 김씨의 유족은 이를 근거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지태씨는 1962년 부정축재 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반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 평을 기부했으며 이 재산은 5·16장학회의 설립 기반이 되어 두고두고 장물 논란이 일었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선 기간 동안 박근혜 당시 후보의 외곽조직이라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정부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 방송사 보도책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부른 것은 유례없는 일"(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국정감사 증인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법 위의 종편? 초법적 종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자동차 대중화 시대에는 운전기사가 대중화 되듯 사용자인 기자와 PD가 기술을 만드는 시대가 왔다. (특정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이 빨랐던 이유는) 디지털 전환 본부장을 문과 출신으로 했기 때문" (송도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

☞2008년 10월 29일 통일IT 포럼 조찬 토론회…최근 UHD 추진협의체 위원장으로 추대된 송 위원장의 옛 발언을 들으며, 현재를 돌아본다.

지역 MBC, 전파료로 길들인다

MBC 본사가 지역 MBC에 지급하는 전파료를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다. 당장 지역 MBC 구성원들은 일방적인 전파료 재조정이 지역 미디어 말살에 해당되는 구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MBC 본사는 고정비 비율 대폭 축소·평균 시청률을 반영한 변동비 확대 등을 포함한 '전파료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MBC 본사는 합리적인 배분 구조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MBC에 지불하는 전파료를 조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파료는 지역 MBC가 MBC 본사 프로그램, 광고 송출 대가로 받는 비용이며 MBC는 지역 MBC 18개사 전파료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50% 미만으로 축소하고, 평균 시청률 등을 반영한 변동비 비율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BC 본사는 이 재조정 안을 내년 1월부터 3년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반발은 거세다. 당장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지역지부는 17일 성명을 발표하며 "10월 18일 전파료 재조정 합의는 곧 지역 말살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최근 한 지역 MBC에서는 직원 대상 광역화 설명회가 열렸고 광역화 TF 구성에 합의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고 설명하며 "전파료 재조정은 지역사 통제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진행되는 계산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절차와 내용상의 수많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료 재조정을 속전속결로 매듭지으려는 것은 지역사 강제 통합합보다 더 잔인하고 교묘한 폭력"이라고 질타했다. 요약하자면, 이번 전파료 재조정을 통해 MBC 본사가 사실상 지역사 통제합을 염두에 둔 정치작업에 돌입했다는 비판이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최철환
편집주간 | 김성훈
편집위원 | 김윤중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박명석
편집장 | 최진홍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김주옥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성전&화성프린트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총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KBS는 10월 11일 KBS 신관 기술본부 대회의실에서 가전사(삼성전자·LG전자)와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수신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사(KBS-삼성전자-LG전자)는 △차세대 방송 서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수신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시에 본 업무 협약식에서 KBS 이종욱 기술본부장은 "KBS는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송신인프라를 마련한 만큼 이제는 수신사 측면에서 시청자가 편리하게 무료로 지상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다채널 방송과 UHD-TV 등 차세대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전사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시청자가 다양하고 고품질의 방송 서비스를 불편없이 무료

로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KBS와 가전사의 수신환경개선 협력체계를 두고 "지상파 방송 플랫폼의 위기를 단박에 타개할 수 있는 절묘한 정책"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유료방송 중심의 뉴미디어 발전 로드맵과 연이은 유료방송 수평규제 및 규제완화의 분위기 속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합리적인 자구책을 찾았다는 평가다.

게다가 지상파 직접수신을 제고에 있어 본 협약식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 KBS를 비롯해 DTV KOREA를 위시한 다양한 단체에서 직접수신을 제고에 있어 긍정적인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10% 내외의 '수치'는 여전히 부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협약식을 통해 KBS가 제조사와 함께 공시청 설비 및 안테나 판매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지상파 방송사의 위상제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불안한 종편, 서로에게 짐을 겨누다

종합편성채널이 침묵의 카르텔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개국 후 지금까지 단합된 역량을 뽐내며 외부의 위협에 합종연횡으로 대항하던 옛날의 종편이 아니다. 이제 이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의 연장선상에 섰으며, 살아남기 위한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의 등에 칼을 꽂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국정감사라는 ‘국가적 이벤트’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장 각 종편의 모기업인 대형 신문사들은 종편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기치로 내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평가하는 사실과 기사를 연이어 쏟아내며 치열한 눈치작전에 돌입했다. 조선일보는 16일자 ‘종편 4사 주주 구성 때 무슨 일이…모두 다 검증해야 기사를 통해 TV조선은 물론 방통위 국감에서 종편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물론 그 대상은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와 매일경제 종편인 MBN의 출자 과정이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동아일보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통해 채널A에 우회 출자를 했고, 대한항공도 김 전 회장을 통해 채널A에 우회 출자를 했다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깊이있게 전담하는 한편 ‘MBN만 왜… 주주 현황 공개 거부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MBN이 방통위의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점을 지적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중앙일보도 빠지지 않았다. 이에 중앙일보는 4면을 통해 방통위 국감 내용을 보도하며 “일부 종편의 과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지적했다. 종편이 보도전문채널로 변질되었다는 야당 측 의원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담한 셈이다. 이는 올 상반기 종편사의 보도 비율 중 유일하게

JTBC만 14.1%만 기록했으며, 다른 종편들이 모두 40%를 넘긴것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으로 읽힌다.

동아일보는 차별화 전략으로 다른 종편을 압박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TV조선 김 본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정식으로 상임위에 제출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 파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증인 채택엔 합의를 했지만 방송사의 보도책임자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는 행위는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언뜻보면 보도본부장이 국감에 출석한 상황을 비판하는것 같지만 여기에는 TV조선 본부장의 불출석으로 방통위 국감 자체가 파행으로 치닫은 사실을 비판하는 한편, 역으로 채널A의 보도본부장이 출석한 것을 은연중에 강조한 셈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각 종편이 자신들의 모기업인 거대 신문사를 통해 서로의 행보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물론 내년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며 심사에 탈락하는 매체가 나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고개를 드는 만큼, 각자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일종의 생존게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다양한 루트로 종편 심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만천하에 알려진 이상, 각자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종편 4사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종편의 이전투구를 단순히 ‘경매게임’의 시선에서 재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시각도 있다. 종편 4사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다름을 벌이고 있지만 당장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권당인 새누리당

의 반응도 특기해야 한다.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이 국감에 불출석한 반면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사로서 (국감장에) 나오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고 회사뿐 아니라 타 언론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상황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새누리당은 특정 언론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국회보다 위에 있는 종편에 대해 집권여당이 편협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종편의 집단 생존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최근 JTBC가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의 주도 아래 삼성의 치부를 건드는 메인 뉴스를 방송해 커다란 반향을 이끌었다. 당장 JTBC가 손석희 사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말의 의혹을 해소시켰다는 여론과 함께 말 그대로 호평일색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석희 사장이 취임한 이후 자신에게 쏠리는 의혹을 씻어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삼성과 관련된 아이템을 발굴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이번 JTBC의 보도는 그 자체로도 대한민국 언론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지만, 내년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각 종편이 뼈를 깎는 인내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단순한 현안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는 각 종편이 서로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차별화 시도를 본격적으로 이어가면서 일회성 이벤트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상존하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8VSB, 새로운 국면? 정치적 레토릭인가, 진정한 가능성인가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대응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8VSB 허용이 종편특혜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부분은 부당이다. 정부 입각에서는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긴 호흡으로 허용시기를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장 파도는 파하고 보자는 식이다.

현재 케이블 MSO는 전면적인 8VSB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시청자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의명분이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케이블 MSO의 8VSB 허용은 ‘고화질’에만 매몰된 절름발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비판과 함께 효소핑 송출료를 둘러싼 이윤게임의 확장판이고, 더 나아가 8VSB의 허용에 따른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종편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상존하는 양날의 검이다.

이런 상황에서 8VSB 허용과 비슷한 현안인 클리어캠 TV의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 10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클리어캠 TV 제조사 모델을 선정하며 12월부터 실질적인 보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 클리어캠 TV도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 논란과 비슷한 점이 많다. 둘 다 절름발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악명과 더불어 특정 진영의

특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클리어캠 TV는 당초 김장일 새누리당 의원의 일명 유료방송 지원 특별법에 포함되어 정책적 동력을 모으다가 각계의 반발에 직면하자 저소속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 보급으로 선회한 바 있다. 또 출시 시기도 당초 9월에서 10월, 이제는 12월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이는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클리어캠 TV 현안이 예상외로 심각해지며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이는 8VSB 허용 논란에도 고스란히 재현될 조짐이다. 물론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미래부가 8VSB 허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종편 특혜라는 비판이 8VSB 허용 논란과 교묘하게 겹치는 순간 해당 현안은 휘발성 있는, 명백한 정치적 아이템이 되어 버렸다.

물론 정부는 8VSB 허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클리어캠 TV 보급 계획의 지연과 종편특혜 논란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해당 아이템에 대한 속도조절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OECD 국가 중 유료방송에 대한 8VSB 허용이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과 더불어, 군소 PP 퇴출 가능성 및 절름발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CPS 문제와 더불어 전 유료방송의 8VSB 허용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 종편 특혜까지 포함되었으니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미래부가 쥐고 있다.

참고로, 8VSB 허용이 시청자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냐는 반론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에게 선명한 방송을 무료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는 뜻이다. 이는 필자가 취재를 하면서 만나는 방송사 타 직군 및 관련 기자들에게 자주 듣는 논리다. 즉, 케이블 MSO 및 종편특혜 등의 부작용이 있어도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안이 아니냐는 의견인데, 단언하자면 ‘어불성설’이다. 모든 부작용을 차치한다고 해도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시청자 입장에서도 독이 든 성배다. 생각해보라. 10년 전만해도 일반 시청자 중 그 누가 3D와 HD, UHD 등 다양한 뉴미디어 시대를 예상했겠는가. 방송기술의 발전은 오로지 무료 보편의 가치에 입각해 일반 시청자의 복지로 귀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고화질에만 정점을 찍은 ‘유리벽’이다. 더 나은 미디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시청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양방향도 필요없고 다채로운 방송기술도 필요없으니 8VSB 허용도 인정하자고 말하는 이들은 시청자를 조삼모사의 격인 속에 묶어박는 것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김종국 MBC사장 “단협 체결하려면 언론노조 탈퇴해라”

김종국 MBC 사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지부 측에 “언론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식의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 8일 노사협의 자리에서 김 사장이 ‘조합에 소속돼 있는 언론노조,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엔 정치위원회가 있고 규약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정파적 정치성을 띤 만큼 조합과 공정방송을 논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발언했다’며 ‘사실상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싶으면 언론노조에서 탈퇴하라’는 식의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사측, 더구나 사장이 직접 이 같

은 주문을 하는 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단체와 연대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고민하는 것까지 그 권리는 MBC 2천여 조합원들에게 있지 결코 사장의 말 한 마디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현재 김 사장의 이러한 행동은 지난 5월 사장 선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동조합의 언론노조 탈퇴 유도’ 때문이라며, 일부 방문진 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세운 공약을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구로 활용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축인

단체협약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단체협약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 측도 “단체협약이 없는 지금의 상황을 더 즐기고 내년 3월 사장 선임 국면에 또 다시 꺼내 놓을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김 사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방송을 지키겠다’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MBC 2천여 조합원들의 고민과 합의 속에 지속되고 있는 연대를 실효도 없는 ‘정치집단’으로 몰아붙이는 무도한 짓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칼럼 종편의 거짓말, 방송기술로 찾는다

PP와 지상파 수준의 간극에서

지상파 MMS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시절(물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지만),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상파 MMS가 지상파 방송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유발시켜 중국에는 다양한 미디어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은 지상파 의무재송신 현안에서는 전혀 다른 논리를 내세웠다. CPS 과금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을 두고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무재송신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새삼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축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상파 MMS를 통한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 구축에는 지상파의 과도한 영향력을 경계했으면서, 의무재송신 채널 대상 확대에는 찬성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두고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축소하기도,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기도 한 것이다. 인생 참 편하게 산다.

최근 국정감사를 두고 종편의 재승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상한 가운데 막말 방송, 중징계, 편향성 등의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는 종편을 과연 존속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동시에 종편 자체를 둘러싼 탄생과 특혜논란은 물론, 등장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석연치 않은 이유들을 모조리 집어내어 엄정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을 위시한 시민사회단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종편의 주주 구성 및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조치 등을 비롯해, 다양한 결격사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종편의 ‘인생 편하게 사는 법’이다. 힌트는 위에서 설명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태도다. 10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민주당 유성희 의원이 주최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종편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을 펼쳐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종의 ‘발표회’를 열 자리였다. 그리고 여기서 ‘종편 도입 과정에 대한 검증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 제안’이라는 발제를 맡은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의 발언이 흥미롭다. 김 팀장은 발제문 8~9페이지,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통해 종편

이 방송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청사진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면밀히 분석하며 “종편은 때로 PP의 입장에서, 때로는 지상파의 입장에서 스스로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김 팀장에 의하면 종편은 방송산업 발전기여 계획을 제출하며 유료방송 선순환 구조 개선, 방송장비 국산화, 연구투자 계획 및 콘텐츠 투자 계획 등을 정부에 약속했다고 한다. 동시에 종편은 3D 및 UHDTV 등 다양한 뉴미디어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방송기술 발전 전반에 거친 광범위한 투자와 개발을 약속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팀장은 이러한 종편의 호언장담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던 계획’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종편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다. 단순히 채널을 공급하는 PP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정체성인 ‘종합편성채널’의 역할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이 대한민국 방송기술 발전을 위해 UHDTV까지 손을 대겠다는 김 팀장은 이러한 청사진이 모두 종편 승인 과정의 졸속처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한 마디로 듣기 좋은 말만 썼다는 비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PP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장비 국산화 및 3D, UHDTV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발전을 지상파 수준에서 약속했던 종편이 막상 다른 영역에서는 은근슬쩍 ‘기준완화’를 요구한 부분이다. 실제로 김 팀장은 종편의 방송시설 설치, 운용계획에는 지상파의 현재 시설보다 축소된 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뜬구름 잡기의 정도에서 약간의 현실성이 담보되는 영역에는 슬쩍 스스로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게다가 지난 9월 6일 동아일보는 아예 대놓고 5월에 의결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가 엄격하다는 ‘엄살’과 함께 그 기준이 지상파보다 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종편 봐주기의 결정판’이라는 말을 들던 당시의 방통위 재승인 안을 두고 말이다.

지금 종편은 각 상황에 따라 PP와 지상파의 수준을 오가며 유리한 고지를 찾고 있다. 이는 지상파 MMS와 의무재송신 확대 논란에 일하는 유료방송의 행태와 비슷하다. 종편의 거짓말과 뻔튀기, 그리고 이중잣대는 여기서 나온다. 더욱 엄격한 재승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은 자명할 것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2013 가을 디지털 방송 컨퍼런스’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오는 11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2013 가을 디지털 방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방송기술교육원이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방송,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 아래 700MHz 주파수 대역과 차세대 방송, UHDTV 개발 및 보급 현황, HEVC

기술 개발 현황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구급 TV 서비스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외에도 강강현실과 세컨드스크린, N-스크린 서비스의 대표 주자 격인 POOQ 등에 대한 강의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미래부, 해외 진출 적극 지원할 것” 방송장비 13개 업체 ‘히든챔피언’으로 선정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내 방송장비 업체를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히든챔피언은 제작·편집, 송출, 송신, 수신, 솔루션 등 5개 분야 총 13개 업체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방문, 3차 최고경영자 인터뷰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넥스트다이어, 다림비전, 대경바스컴, 디엠라이트, 보은전자방송통신, 케이투이, 티브이로직(이상 제작·편집 분야), 호서텔레콤(송출 분야), 진명통신, 하이게인인테나(이상 송신 분야), 루먼텍, 스펙트럼통신기술(이상 수신 분야), 씨아이에스텍(솔루션 분야) 등이다. 미래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세계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해외 디지털 전환 예정국 중에서

히든챔피언이 생산한 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할 뒤 현지 시범 서비스 등을 통해 해외 판로 확보와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정부 보증, 해외-국내 관계자 인적 상호교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이들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방송장비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경영 전문가 등으로 ‘방송장비 해외진출 추진 전략팀’을 구성해 마케팅 대상 확보와 판매전략 수립, 히든챔피언간 관련 정보와 사업 노하우 공유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서 급증하는 방송장비 시장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히든챔피언 제도로 국내 방송장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요동치는 '방송기술'

미래 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700MHz 공동 연구반이 가동되는 한편, 해당 주파수와 관련이 많은 UHD 방송 공동협의체도 본격도에 올랐다. 동시에 미래부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및 10월 16일 채널재배치를 기점으로 촉발되는 방송기술계의 오래된 현안도 동시다발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은 김용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책임 아래 가동되고 있다. 10월 4일 첫 회의를 진행한 공동 연구반에 대해 '통신 편향성'이라는 비판이 상존하는 부분은 부담이지만 정부는 해당 연구반의 연구 결과에 따라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00MHz 대역 주파수의 연내 할당이 능사가 아니라는 발언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위원장은 10월 8일 방통위 출입기자단 다과회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 "연말에 어디에 얼마씩 준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로드맵을 정하는 것도 결정이니까 두고 봐야 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방송과 통신의 치열한 논리전쟁이 한창인데다 통신사의 LTE 주파수 경매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적 공조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이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이 가동 중이

나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이 해당 주파수의 '방송용 활용'에 무게를 둔 기존 방통위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동시에 해당 주파수의 항배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UHD TV도 커다란 변혁의 기로에 섰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송도군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UHD 방송 공동협의체를 발족시키며 양 기관의 담당과장과 학계·연구계, 매체별 방송 사업자, 콘텐츠 제작사, 가전사 등을 대표하는 임원급 전문가 21명을 소집했다. 당장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과 더불어 지상파-유료방송의 UHD TV 발전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은 방송기술계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항배에 따라 방송이 가지는 무료보편적 공공의 미디어 서비스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퇴보하느냐의 기로에 놓였으며, UHD TV의 발전 주체가 지상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이나를 두고 새로운 뉴미디어의 역사가 창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래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주파수 할당 범위와 더불어 전국 3권역으로 진행된 채널재배치 종료라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겹치며 관련 정국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었던 방송기술 현안에 많은 관심이 쏠린 이유다.

최진홍 rgdsz@kobeta.com

TV 수신료, 한전이 EBS 2배

KBS가 지난 5년간 수신료 위탁징수 대가로 한국전력공사에 1,77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 사용 주체인 EBS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KBS로부터 제출받은 '수신료 위탁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S가 한전에 지급하고 있는 수신료 위탁 징수비용은 지난 2009년 368억 원, 2010년 383억 원,

2011년 389억 원, 2012년 39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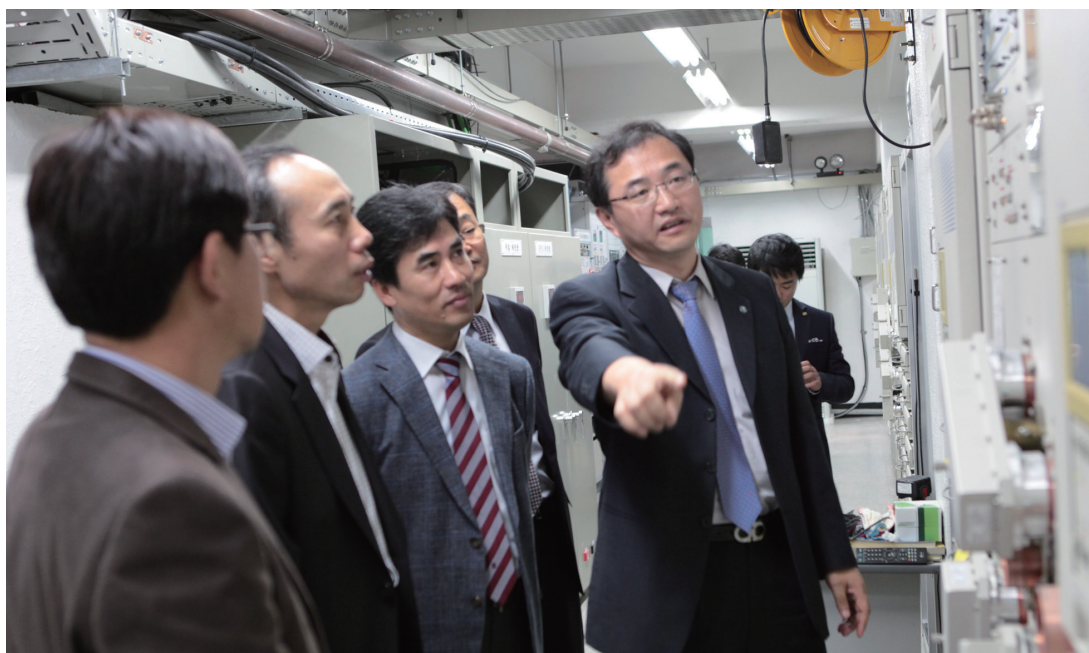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받고 있는 수신료 위탁수수료 비율이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수신료 사용 주체인 EBS는 여전히 수신료의 3%(실제 배분율 2.8%, 수신료 2,500원 중 약 7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있다"면서 "수신료가 공기업인 한전 배분리는데 쓰일 것이 아니라 EBS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EBS의 전체 예산(2,789억 원) 중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73.3%(2,044억 원)로 이는 광고, 출판, 수능연계교재 등을 통한 상업적 수익이다.

반면 수신료, 방송통신발전기금, 특별교부금 등으로 이뤄진 공적재원은 26.7%(745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한전이 무위도식하며 EBS 수신료 수입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배달료로 챙기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그간 개선요구가 이어져온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1면에 이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도 역사적인 채널재배치 현장을 함께 했다.

이에 본지 발행인인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

합회 회장은 10월 16일 오후 2시 남산 송신소를 방문해 KBS, MBC, SBS 방송기술인들을 독려하는 한편 금일봉을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또



남산 송신소를 찾은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정파 정책관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수도권-충청권-강원권 채널재배치 현황을 보고받고 각 시설을 참관했다. 이에 최동환 연합회장은 "채널재배치 사업은 그 자체로 방송기술은 물론 방송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다"며 "이번 채널재배치 사업을 기점으로 방송용 필수 주파수의 긍정적인 활용과 뉴미디어 발전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본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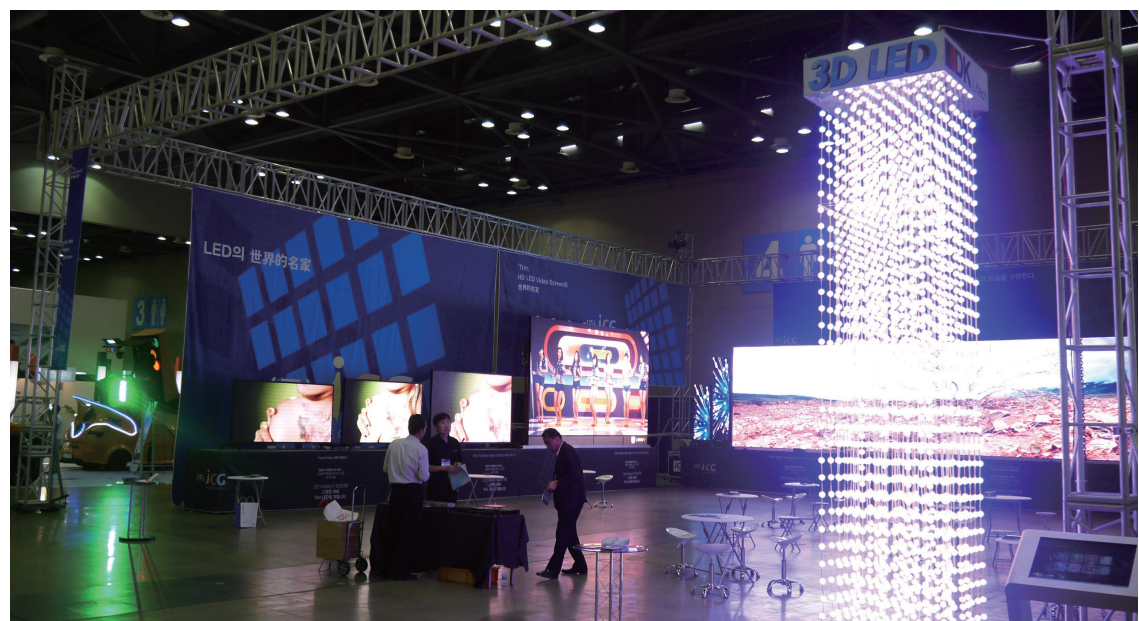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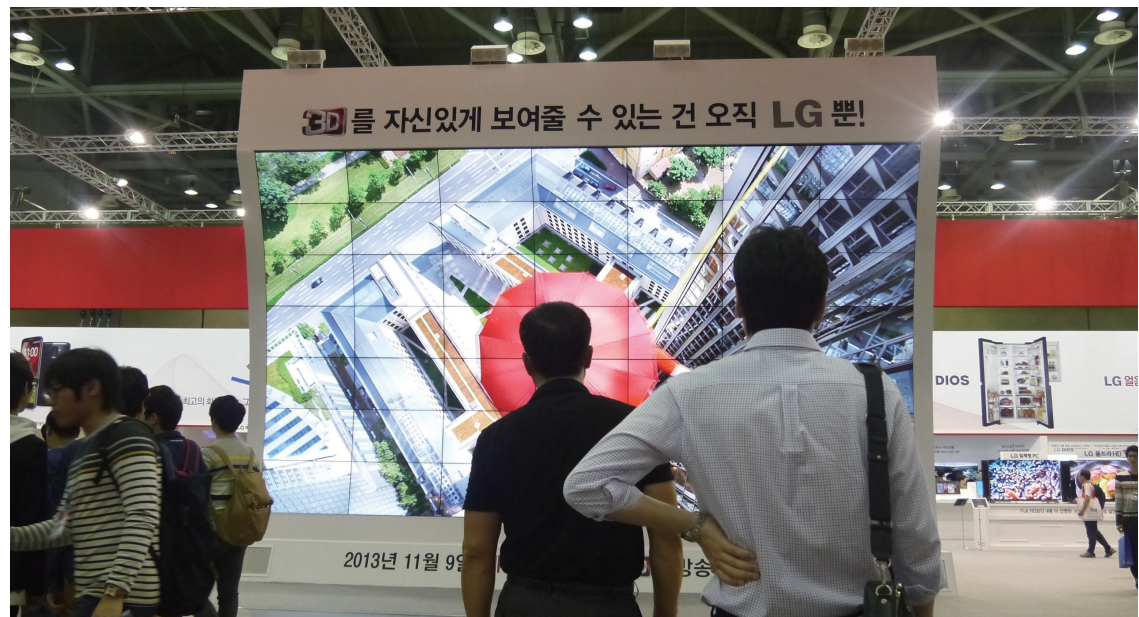
최진홍 rgdsz@kobeta.com

사진으로 보는 2013 한국전자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30개 국 1000여개 업체가 참가한 2013 한국전자전.

85인치와 98인치 UHD TV를 선보인 삼성전자와 세계 최초 77인치 UHD 올레드 TV 및 대형 3DTV를 전면에 세운 LG전자를 비롯해 다양한 첨단 기술의 향연이 벌어졌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심층분석] UHDTV, 어디로 가나

UHDTV는 700MHz 대역 방송용 필수 주파수 및 다양한 현안과 맞물려 있는 핵심적이고 복합적인 아이템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권위있는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성규 SBS 부장(미래방송연구회 부회장/전 방송기술저널 편집주간)의 글을 통해 UHDTV의 미래와 비전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칼럼을 준비했다. *편집자 주 - 의견을 피력하는 기고의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지상파 UHDTV 방송, 미래를 앞당긴다

박성규 SBS 부장(미래방송연구회 부회장/전 방송기술저널 편집주간)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수도권 DTV 송신기 채널 재배치 작업을 끝으로 이제 겨우 마무리되고 있지만, 어느새 방송기술은 UHDTV 방송이 가능할 정도로 진화하였다. 산업과 인간의 생활환경을 빠르게 변화

시키고 있는 디지털 혁명시대에 기술의 진화 속도를 볼 때 지금 UHDTV 방송의 도입은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아마도 이미 우리 가까이 다가온 UHDTV 방송은 지상파 방송이 현재 처해있는 플랫폼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시청자 수신환경과 국민 문화 향상을 유도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UHDTV 기술은 일본이 먼저 연구를 시작하였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지상파 방송 전송기술을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한국의 우위와 중국의 약진에 의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아직 일본이 완전한 UHD 방송환경을 완성하지 못한 시기가 우리에게 기회는 될 수 있다. UHD 산업 후발국가인 미국이 아주 작으면서도 필름 영화용 렌즈를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디지털시네마용 UHD 카메라 개발을 통하여 한때 UHD 카메라 이용환경과 시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듯이, 우리도 현재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1.2위의 지위를 가지고 UHDTV 방송환경을 조기에 구축하여 일본보다 앞설 수 있다면 디스플레이 산업과 UHD 콘텐츠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류 드라마의 해외 호응과 K-POP의 인기와 더불어 우리가 만든 UHDTV 콘텐츠 역시 세계 시장 선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UHDTV 콘텐츠는 UHDTV를 도입하려는 후발국가에 수출하게 되고, 저개발국가에는 고품질 디지털시네마로 보급함으로써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결국 UHDTV 방송은 풍부한 콘텐츠 제작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 참여함으로써 UHDTV 소스 확보와 부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 방송 5개 채널에서 하루에 각각 1개씩의 UHD 콘텐츠가 방영되어도 한 달이면 150개가 나오고 1년이면 2,000개 가까운 UHD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초고화질 UHD급-3DTV 제작을 통해

여 실제로보다 더 실감나는 3D 영상세계와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열어 갈 수 있다.

700MHz 대역 주파수는 지상파 UHDTV 방송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대역이다. 그러나 통신에게는 유일한 필수대역이 아니라 그냥 더 있으면 좋은 주파수일 뿐이다. 국내 방송 환경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송품질과 수신 환경을 구축하고, 향후 8K-UHDTV 방송으로의 진화를 통하여 세계시장을 계속 선점하려면 700MHz 주파수는 방송에게 더욱 필요한 주파수가 된다. HDTV 이후 아직 새로운 차세대 방송에 대한 뚜렷한 준비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주파수 활용계획을 무조건 모방하기 보다는 오히려 독립적인 계획 수립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편적 서비스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은 Fast Follower 보다 First Mover가 기억되고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지상파 방송은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환경으로 보편적 서비스가 목적이다. 지상파가 전파하는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경제적 수익을 기준으로 주파수의 효용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금 통신이 사용하고 있는 LTE, LTE-A, Wi-Fi, WiBro 기술은 모두 OFDM기술을 근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OFDM기술이라면 이미 방송에서는 DVB-T, DVB-T2, ISDB-T 등 유럽방식과 일본방식의 DTV 전송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1990년대부터 통신보다 먼저 상용화시킨 기술이다. 현재 UHDTV 방송 구현이 가능한 DVB-T2 기술도 이미 2009년 영국에서 통신의 LTE 기술보다 앞서서 HD다채널 방송에 상용화된 OFDM 기술이다. 그러므로 주파수 이용 효율에 있어서 통신이 앞서 있고 통신기술이 가치가 높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표현이 된다.



[그림1] 4개의 주파수에 의한 전국망 SFN 구성도

UHDTV, 지상파에도 길이 열리나

세계 방송기술의 거대한 흐름이 UHDTV 발전으로 수렴되고 있다. 물론 코덱 및 기타 인프라 구축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UHDTV가 차세대 뉴미디어 플랫폼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동시에 해당 플랫폼을 둘러싼 각국의 시장 경쟁전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는 UHDTV 발전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다. 3DTV 발전을 둘러싼 '요동치는 변곡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국내의 UHDTV 로드맵은 콘텐츠 시장이 태동하기 전부터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기형적인 성장 모멘텀을 빠르게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로드맵은 삼성전자와 LG전자로 대표되는 국내 굴지의 가전사들이 주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UHDTV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고 다소 성급한 '디스플레이 시장의 기형적 성장'이 아이러니하게 관련시장에서 작동하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당 기술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분히 정치적인 국면에 접어들며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급격한 팽창으로 UHDTV 발전 모델이 '어디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사실상 등 떠밀린

질문의 끝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유료방송'이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에서는 UHDTV 발전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은 케이블 및 위성방송을 위시한 유료방송이며, 이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핵심이라고 본다. 새로운 방송기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적 바탕에, 유료방송의 산업적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지상파 방송의 UHDTV 발전에 있어 기본전제인 주파수 문제도 복잡하게 얹혀 있다. 창조경제의 또 다른 축인 통신 기술의 발전을 위해 모바일 광케로 플랜 2.0을 수립한 미래부의 입장에서 통신사에 주파수를 제공하는 한편,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육성은 모든 아귀가 들어맞는 '정답'인 셈이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도 다르지 않다. 미래부와는 달리 다소 추상적인 개념, 즉 방송의 인문학적 요소를 감안해야 하는 조직의 특성상 UHDTV 발전에 있어 미래부만큼의 목소리는 내지 않지만, 적어도 침묵의 동의를 보낸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는 주파수 수급에 실패해 지상파 중심의 UHDTV 발전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된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지상파 디지털 전송방식 결정의 '오마주다'.

[그림1]에서 보여주듯이 만약 6MHz TV 채널을 사용하여 각 방송사 네트워크별 SFN(단일채널 송출망)을 구사한다면 각각 4개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배치하고 재할용할 수 있다. KBS1, 2, MBC, SBS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EBS와 OBS는 단일 내용이므로 각각 한 개의 채널만 배정한다면 총 18개의 채널이 필요하고, 채널당 6MHz폭으로 되어 있으므로 총 108MHz폭의 주파수가 필요하게 된다. 마침 700MHz 대역이 698~806MHz로 총 108MHz폭이므로 모두 지상파 SFN망 구성에 필요한 주파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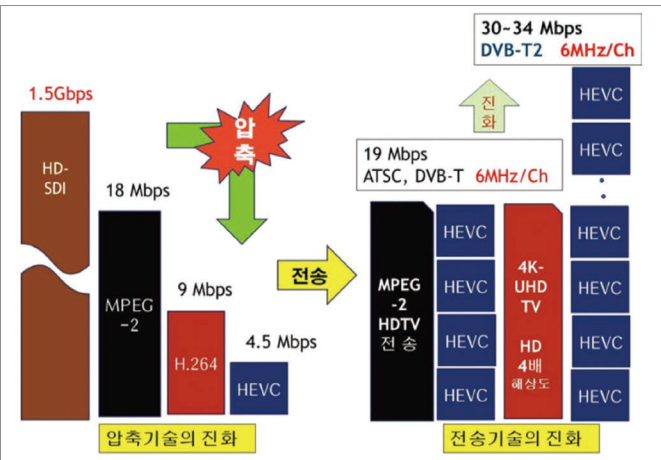
그러나 앞으로 실내수신이 강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한 수신환경을 만들자면 2개의 주파수를 이용한 SFN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VHF대역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면 메인 송신기에서 F1주파수로 신호를 방사하고, 그 외 다른 중계기와 갭필러(소출력중계기)들은 F1신호를 받아서 F2주파수로 재송신한다. 이 경우 각 중계기로 전달되는 프로그램망 비용이 절감되고, 동일주파수 피드백에 의한 열화도 없어 시스템 가격이 저렴해지므로, 필요한 곳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다. 또 각 가정의 갭필러도 무선 Wi-Fi AP 비용 정도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실내 수신환경 구축이 유리해진다. 특히 VHF 주파수의 특성은 전달력과 회절성 및 유리 및 건물 투과력이 좋고 전달범위가 넓으며, OFDM에서 이동수신 한계속도가 높아 UHDTV 신호와 함께 전송될 DVB-NGH 등 차세대 모바일TV 신호 수신에도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UHDTV 방송을 하더라도 무늬만 UHDTV이고 경쟁매체보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수신마저 쉽지 않아 또다시 유료매체에 의존하게 된다면 지상파 방송의 플랫폼 위기는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OFDM 기술의 특성상 품질과 신호의 강인성을 모두 추구하려면 송신 출력을 높이거나 채널 주파수폭을 확장해야 한다. 압축과 전송기술의 발달에 의해 UHDTV는 지금의 6MHz 채널환경에서도 훌륭한 품질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UHDTV 방송에 10MHz폭 채널이 허용된다면 세계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신환경 구축이 가능하고, 향후 8K-UHDTV 방송으로의 진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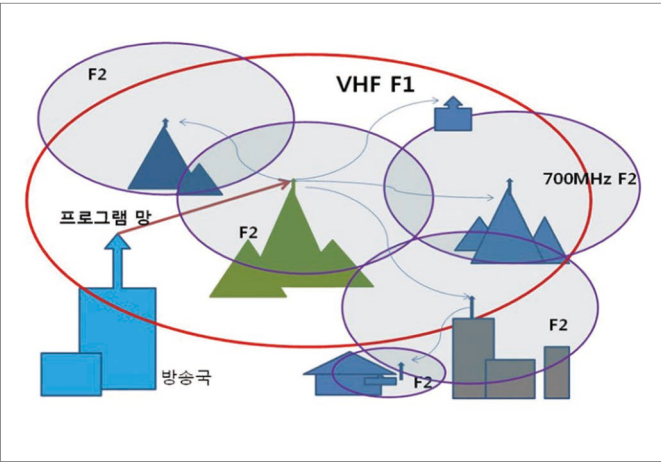
2013년 새로 탄생한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영상압축 기술은 현재 HDTV에 사용되고 있는 MPEG-2 압축기술보다 4배의 압축 능력이 있고, 인터넷과 대부분의 동영상 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H.264 압축기술보다 2배 이상 압축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모든 영상 전달과 저

장 기기에 HEVC 압축기술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도 조기에 UHDTV방송을 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HEVC 압축기술 세상으로 변화에 동참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리드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자면 거실의 TV뿐만 아니라 핸드폰과 태블릿PC와 노트북 등 개인형 멀티미디어 기기에서도 수신이 자유로워야 한다. 편리하고 자유로운 수신환경은 지상파의 장점을 회복하고,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을 만족시켜 주는 UHDTV 방송의 또 다른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다.

UHDTV는 방송기술을 넘어 방송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시대의 조류다. 현재 각 나라는 UHDTV의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도 동시에 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로 지금, UHDTV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그림2] 영상 압축과 전송기술의 진화



[그림3] 2개의 주파수를 이용한 SFN송출망 구성도

최진홍 방송기술저널 편집장

는 이러한 지상파의 노력을 무시하고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만 맹목적으로 추구해왔다. 그러나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 여부와 더불어 UHD 방송 추진 협의체의 긍정적인 신호는 다분히 고무적이다. 물론 지나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하지만, 콘텐츠와 플랫폼을 모두 소유한 강력한 방송 사업자이자 보편적 미디어 가치를 추구하는 지상파 방송이 중심이 된 UHDTV 발전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한민국형 지상파 UHDTV 발전 모델이 세계를 흔들 시간이 왔다. 최근 케이블 방송의 UHD 기준이 마련되는 등 관련된 노력들도 특기할만 하지만, 핵심을 잃지 말자는 뜻이다.

여담이지만, 10월 11일 KBS는 가전사와 직접수신을 제고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차세대 방송 서비스에 대한 정합테스트 △실내외안테나 판매 △공동주택 등 공시청시설 공동점점 △TV수상기 수신민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개선 등 차세대 방송 서비스와 수신환경개선관련 등에서 상호협력 하는 것에 합의했다. 분야는 다르지만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사의 협력을 통한 최대한의 미디어 서비스 확대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러한 협력은 고스란히 UHDTV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은 UHDTV 플랫폼 사업의 선두에서서 이를 발전시키는 작업에 사활을 걸어 왔다. 하지만 정부

[국감특집] 무엇이 화두일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났다.

물론 확인감과 별도의 일정이 남아있지만, 현 정부 들어와 처음 실시된 미래부-방통위 국감은 화려한 말잔치와 여운을 남기고 잠정 종료되었다. 과연, 무엇이 화두일까?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①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격돌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증인으로 채택된 김정수 한 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과 문제철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이 날카로운 신경전까지 벌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및 유승희, 유성엽 민주당 의원도 가세해 날선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김정수 사무총장은 “2008년 IPTV 도입 이후 KT만 전국 사업권 2개를 갖고 650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며 “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가 없어 가입자 독식 우려가 있으니, 유료방송의 권역별 제한을 풀고 전부 전국사업자로 분류해 특수관계자를 없애고 3분의 1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CJ 특별법의 업그레이드판을 주장하는 한편 위성방송과 망, IPTV를 동시에 보유한 KT에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현재 김 사무총장의 이러한 주장은 수평규제 및 동일규제의 틀 안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장 관련 법도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문제철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그렇게) 규제하면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케이블을 장악한 태광, CJ 등 재벌 SO들에 넘어간다”면서 “오히려 케이블의 3분의 1 권역별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지 위성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을 않는 일이고, 창조경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을뿐더러 ‘노골적인 KT 죽이기’라는 반론인 셈이다. 여기에 문 사장은 거대 MSO를 가진 회사들의 실명을 나열하며 사실상 역차별 논란을 지피는 전략으로 나왔다.

동시에 문 사장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한 중재안, 즉 통합 방송법을 제정해 전제로 모든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IPTV와 위성방송을 동일 서비스로 보고 추후 일몰제로 규제하자는 제안도 거부했다. 상대적으로 김 사무총장이 권 의원의 중재안을 두고 사업자 합산규제의 틀 안에서 찬성의 뜻을 보인 반면, 문 사장은 임의적인 시장 점유율 규제 정책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②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이 또 재연됐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에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CPS를 280원씩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산정 기준에 대해 유료방송사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된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논란까지 합세하면서 국감장은 거대한 성토의 장으로 돌변했다.

이에 국감에 참석한 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의 저작권과 대기 지불의 당위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 시청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상파도 280원을 유료방송으로부터 받은 것도 IPTV가 들어선 2008년부터다”고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즉 지상파 재송신 중단으로 촉발된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280원이라는 CPS 산정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여기에 김 사무총장은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10% 정도인데 현재의 KBS 1TV와 EBS정도만 의무송신 채널로 지정된 것은 공영방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재 2개 채널만 대상인 의무재송신 채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김 사무총장의 이러한 발언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IPTV법안 개정안의 뿌리와 관련이 깊다고 진단한다. 해당 개정안이 의무재송신 범위를 현행 KBS 1TV와 EBS에서 KBS 2TV, MBC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자 지상파 방송도 반격에 나섰다. 이에 업재용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본부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2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며 “지상파의 디지털 커버리지가 92%에 이르고 위성방송과 IPTV를 통해 시청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읽힌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있어 CPS 산정 기준을 논하기 전에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감안해야

하며, 디지털 커버리지가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이상 국민의 보편적 미디어 시청권은 지상파 플랫폼을 중심으로 충분히 구현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물론 업 본부장의 발언은 근거가 충분하다. 낮은 직접수신율을 타개하기 위한 지상파 방송사의 다양한 노력이 디지털시청100% 재단 및 DTV KOREA를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위성 및 국소출력기를 통한 난시청 해소와 더불어 지상파 MMS를 통한 공격적인 방안도 속도감 있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10%라는 김정수 사무총장의 발언은 지상파에 난시청 문제가 있어서 유료방송을 봤다는 것처럼 받아들이 수 있다”며 사실상 김 사무총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직접수신율이 92%에 달한다는 말은 시청자들이 지상파를 선택한다면 직접 수신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는 커버리지에 대한 정의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직접수신율을 바탕으로 하는 지상파 플랫폼의 성장이 지상파 재송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인식에는 대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재송신 협상은 사업자가 협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시청권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뒀야 한다”며 “방통위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③ 미래창조과학부가 무선 전화기 과태료 논란을 해명하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900MHz를 사용하는 가정용 무선 전화기 사용 종료에 대해 공지한 곳이 미래부 홈페이지 말고는 없다”면서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900MHz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무선 전화기 사용 종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다”고 미래부의 정책 홍보 부족을 인정한 뒤 과태료 부과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현재 900MHz 대역에서 쓰고 있는 무선 전화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의 주파수 사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그동안 홈페이지 이외에는 별다른 홍보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10여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 중에는 내년부터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올해 말로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전화기는 900MHz 대역의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로 대부분이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모델이고,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1.7GHz, 2.4GHz 대역의 디지털 무선 전화기는 이용 종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논란이 된 과태료 부과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900MHz 무선 전화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말인지 안 된다는 말인지, 유통과 판매만 금지하고 사용은 가능하다는 말인지 불명확하다”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용자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역시 미래부의 해명 사실을 언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방침이 유효한 것이냐”고 재차 확인한 뒤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무선 전화기의 자연스러운 교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정확한 기술적 검토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KT는 무선 전화기 간섭으로 900MHz 대역 주파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부에 주파수 대역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900MHz 대역에서 통용이불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주변에서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전화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과 무선 전화기의 주파수 대역이 살짝 겹치기는 하지만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 문제가 주파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래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백선하 baek@kobeta.com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이 사실상 통신편향적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700MHz 연구반 구성 가운데 11명 교수 중 방송계 인사는 1명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직할기관인 ETRI, KISDI 관계자가 4명인 반면,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최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발표한 ‘허울뿐인 700MHz 연구반 구성, 전면 재검토하라’ 성명서의 기본전제와 관련이 많다. 연합회가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현재 운용 중인 700MHz 연구반 구성은 편향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 의원의 지적에서 11명의 외부 전문가 구성이 전원 교수로 구성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빠진 부분과 방송계 인사가 1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은 약간 미흡한 부분으로 꼽힌다. 또 전문 연구기관 5명 중 정부 측 인사로 꼽히는 ETRI와 KISDI 관계자가 4명에 이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타당하지만 미디어미래연구소 관계자도 방송에 그리 전향적이지 않다는 점을 누락한 것도 ‘욱의 티로’ 여겨진다.

최진홍 rgdsz@kobeta.com

② 주요 화두는 역시 종합편성채널이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종편 탄생과정에서부터 방송법 위반 사례가 상당했다며 이경제 방통위 위원장에 검찰 수사 의뢰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또문은 야당이 열었다. 이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채널A가 방송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60억 원을 출자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방통위가 사실확인에 들어가야 하고 이는 검찰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편논란에 대해 공권력 개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다소 강경한 발언을 한 셈이다. 이에 최 의원은 “채널A에 출자한 고某的 이름다운 CC골프장 실제 주인이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 밝혀졌다”며 “60억 원을 주고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은 후 이를 출자했다는 것이 확인돼 허위여 의한 승인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내년 재송신을 앞둔 종편의 승인 조건 이행 실태가 총체적 부실에 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종편의 재방비율이 SBS의 4배~6배에 달한다고 “이는 4대강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생태계의 독조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정부가 종편에 6,000만 원에 달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종편의 방송경영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종편 활성화에 활용했다고 강조하며 작년에 실시된 ‘종편의 시청행태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는 사실상 종편 활성화 컨설팅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최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연구의 목적이 종편 활성화 및 시장 내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인 점 △연구 결과를 채널운용 및 프로그램 편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방통위가 국비를 들여 종편을 위한 컨설팅을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연구 보고서가 제시한 제도개선방안은 ‘종편의 심의기준은 지상파와 유료채널의 중간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와 ‘수평적 규제체계는 매우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등 두 가지뿐이며, 종편 방송경영에 관한 내용으로는 홍보·마케팅분야 전략 3가지, 기획·제작분야 전략5가지, 편성분야 전략3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종편의 거짓말도 국감의 화두였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종편이 여론 다양성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보도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편으로 신규 일자리가 2만 이상이 생긴다고 했지만 1,300명으로 당초 예상의 6%밖에 되지 않은 것은 목표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유명무실한 것인지 보여줬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강동원 (무소속) 의원도 배포자료를 통해 종합채널 4사가 콘텐츠 투자 분야 모두 승인조건을 위반했다며 “재송신 심사에 이러한 위반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TV조선이 지난해 1,575억 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행실적은 604억 원, MBN은 1,660억 원 중 711억 원, 채널A는 1,804억 원 중 985억 원, JTBC는 2,196억 원 중 1,647억 원만 이행했다고 지적하며 “이행 평가결과를 반드시 반영해 엄격하게 종편을 심사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최근 발표한 종편 재송신 현안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이경제 위원장은 종편에 대한 위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해 “예당초 (종편) 2개를 기대했는데 4~5개가 되니 경쟁이 치열해질 뿐 아니라 광고가 나빠진 시점과 맞물려 투자가 어렵고 재방송이 많다”며 “시청률은 1%대로 여론의 다양성에는 기여하는 면이 있지만 막말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종편은 보도채널과 달리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장르를 골고루 반영해야 하는데 값싼 토론과 보도만 하면서 보도채널에 가까워 다양한 장르에 대한 투자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 위원장이 종편 수신료 현안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지만, 사실상 기본적인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③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가 종인 출석 문제로 파행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참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자동 산회됐다. 결국 방통위 국감은 파행으로 끝을 맺었고, 향후 일정은 다음달 1일 열리는 확인감사만 남았다.

발단은 이날 오후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이 불참하면서 시작됐다. 김 보도본부장은 “정부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 방송사 보도책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부른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의 증인 채택은 국회의원의 권한이며,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응해야 한다며 김 보도본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동행명령은 국감이나 국정조사 시 증인과 참고인 등이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강제수단으로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신문과 달리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서 “김 보도본부장이 말한 사유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병관 의원은 “방송심의위 제재를 받고도 막말 편파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증인을 부른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민간 방송사 언론인을 불러 보도 내용에 대해 따지거나 추궁하는 것이 언론 자유 실현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측의 의견에 반대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조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자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밤 늦게까지 여야 간사들을 불러 관련 대책을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자정 쯤 폐회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송심의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이해할 수 없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비호와 국감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며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국회법과 국회증인법을 어긴 범법행위자를 비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도 성명을 통해 “그동안 민영 방송사 보도본부장 증인 채택은 언론 자유의 원칙과 철학에 맞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시 한 번 국감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국감 파행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④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해직 언론인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현장에서 “방통위는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 등의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해직 언론인들이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 해직됐다고 판단된다면 방통위가 이들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경제 방통위 위원장은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해 방통위가 나서 해직 언론인들을 복직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해직 언론인 문제는 일반적인 해직과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면서 방통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내 규칙이 있고, (사규를) 위반한 사실을 가지고 방송의 공정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해직 언론인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복직시키지 않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논리에 수긍하지 않는다”며 방통위가 나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종편, 누구의 책임일까

12만 장에 달하는 종편승인심사 자료 검증이 끝났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 시청자 단체 활동가, 언론현업 정책 기술 전문가, 언론 및 경제학자,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한 종편승인검증 TF를 운영해 3개월 동안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부문별로 나눠 분석하고, TF 전체위원이 공유하고 보완하는 과정과 함께 종편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승인조건 중 주요항목에 대한 이행실적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그 결과는 어떨까.

검증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증팀은 총체적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과정, 2009년 종편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당시 위법성과 폭력성을 동반한 집단의 '과잉된 정치적 의도'가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글로벌콘텐츠 강화, 여론다양성 제고, 유료방송시장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입 당시 방통위가 제시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정책목표는 종편 도입을 주도했던 정부와 일부 언론사가 벌인 부도덕한 유착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을 뿐 평가의 지표로 삼을 수 없을 정도의 현실 앞에 용도 폐기된 지 오래다.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에 의존해야 하는 ‘채널사용사업자(PP)’인 종편에 부여된 의무전송채널과 황금채널 배정 등 공영방송 수준의 과도한 특혜는 규제 체계 전반을 혼드는 원인이 되

고 있음에도 종편은 답합을 통해 추가 특혜를 요구하며 규제기관을 겨냥하고 있다.”

사실 종편에 대한 검증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태생이 어떠했으며, 또 지금 어떻게 생존의 활로를 찾으려 하는지, 조직의 사활을 건 전투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일정한 조직 이기주의를 버릴 수 없지만 그러한 논리는 미디어 환경에서 1차적인 거름막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종편은 그러하지 못했으며, 결국 그들은 혹독한 검증의 심사대에 서고 말았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미디어 환경의 대안세력은 꾸준한 투쟁과 광범위한 논쟁의 결과로 모든 검증을 실시할 수준에 올랐다.

언론연대를 비롯한 검증 TF는 말한다. 종편 도입 과정에 대한 검증 결과 종편 승인심사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로부터 부실심사는 시작됐으며, 총점의 80% 이상, 5개 심사사항별 100분의 70 이상, 6개 승인 최저점수 적용심사 항목별 100분의 60 이상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사업자는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방식을 취했고 총 44개 심사항목 중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계량평가 항목은 9개로 그 중 6개 항목은 배점의 40%가 기본점수로 부여됐다고, 그런데 문제는 비계량 수치다. 말 그대로 '고무줄 평가'가 가능한 대목을 보자. 검증결과 총 1,000점 만점에서 계량평가 항목의 총점은 245점인데 96

점이 이미 기본점수로 주어져서 계량평가 항목에서 변별력은 1,000점 중 149점에 불과했다고 한다. 엿장수 마음대로다.

또 심사위원의 선정방식과 운영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검증 TF가 밝힌 대목은 충격적이다. 7개 분야별 전문가 14인을 추천받아 선정했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을 방통위원이 추천했고 나머지 6명이 13곳의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는데, 심사위원 선정에서의 공정성은 논외로 하고라도 방통위에 편중된 독립성이 결여된 구성 방식이라는 평가다. 물론 심사위원의 기본적인 전제를 모르지만, 심각한 결격사유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아무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라 할지라도 승인심사 자료가 12만 장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 9일 만에 세부기준 설정, 자료 분석, 의견 청취 및 확인, 평가 및 종합 등의 전 과정을 진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심사로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민영방송 사업자의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주주구성 의 건전성 역시 맑은 방송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검증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TF는 지배적 주주의 정확한 지분구성이 모호한 심사기준의 허점을 이용해 '쪼개기 출자'가 대거 이뤄졌고 주요주주의 규제를 피

성 기 원 대한미디어3.0연구소 부소장

한 투자자들은 승인 의결을 마치고 대거 이탈해 승인장 교부시점에 31.17%, 채널A의 경우42.63% 주주가 빠져 나갔다고 밝혔다.

종편을 둘러싼 논쟁은 심각하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개탄할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 모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치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시대는 끝이나 다름이 없다. 종편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말을 빌려 본고를 마무리하려 한다. “종편도입에 있어 책임의 시작과 끝은 규제기관인 방통위다. 지난 3개월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시민사회가 매우는 역할을 했다. 종편승인심사TF의 검증결과 발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방통위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했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 재승인 심사안을 결정하는 과정 또한 승인심사당시 드러난 규제 공백을 철저히 배제시켰다는 점에서 방통위는 분명 책임과 행위의 연장선에 있다. 방통위는 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점들을 책임 있게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 보완해줄길 바란다.” 하지만 과연, 이런 정상적인 커리큘럼이 적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 내년 재승인 심사가 사툰 기다려진다.

채널재배치, 주파수는 어디로?

이벤트는 외래어다. 원래 스포츠 용어에서 생겨난 이 단어는 외래어의 차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손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복합적 요인으로 변종했다. 그리고 이 이벤트라는 단어는 정치적 의미와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기점에서의 폭발력을 중심으로 더욱 진화했다. 그래서 이벤트, 이제 이 단어는 단순한 영어나 초어가 아니라 일종의 분기점을 알려주는 시발점이자 극적인 표현요소다.

이제 채널재배치가 완료되었다.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인 채널재배치를 이룬다는,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었다. 물론 문제는 많다. 채널재배치 과정에서 방송사의 지원에 관한 문제는 심각한 잡음이 일었으며, 직접수신기구가 채널재설정을 해야 한다는 부작용은 돌발요소로 꼽힌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도 매워질 수 없는 간극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가 유기적인 화학반응을 일으켜 역발성의 상상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다. 바로 이벤트로서의

채널재배치다.

700MHz 대역 주파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황금 주파수니 방송용-통신용 필수 주파수니 하는 단어를 빼고 담백하게 해당 사안을 들여다 보면, 의외로 채널재배치 사업이 방송기술의 거대한 이벤트임을 주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종의 상징적인 기념식으로서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둘러싼 방송과 통신, 양 진영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그 주파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물론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면 그 주파수가 당장 눈에 잡힐듯 생생한 이슈겠지만 적어도 정책적인 사항으로 보면 그 주파수는 미래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채널재배치라는 국가적인 이벤트가 종료된 이상 그 주파수의 활용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오를 것이다. 논의의 장은 격렬한 토론과 서로를 향한 비방이 난무할 것이며, 그러한 비판은 곧 채널재배치에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이벤트인 채널재배치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아무도 모른다. 물론 개인적인 솔회로서는, 지극

히 단순하게 가장 필요로 하는 진영에 주파수를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는 그 주파수의 주인은 당연히 방송이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그들이 말하는 난시청 해소는 뜬 구름잡기에 비유되며, UHDTV 발전은 너무 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막대한 수입을 창출할 주파수를 방송에 주어도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 즉, 대의명분으로 확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적인 상황에 접근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노출된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구름 위의 대의명분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법이다.

하지만 주지할 부분은, 과연 그 주파수의 재배치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의 역할에 충실한 재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외로 결론은 확실하다. 공영화와 민영화의 논리를 떠나서 주파수의 할당은 가장 적합한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만든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문 민 구 디지털미디어연대 상임이사

당연히 그 주파수의 활용은 방송이 맞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통신의 입장에서조차 주파수 확보가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전에 있어 주파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필수 주파수의 항배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이번 논쟁의 포인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벤트로서의 채널재배치를 맞이했다. 불편함도 많은, 실로 번거로운 일이지만 가법게 감수하자. 문제는 그 주파수의 할당, 700MHz 대역 주파수가 어울리는 주인을 찾을 때다. 주파수 공동 연구반도 이러한 점에 입각해 그 주인을 찾으리라 믿는다. 오직 한 가지, 주파수의 활용이 얼마나 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말이다. 요즘 하도 민영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불안하긴 하지만, 국민을 배제한 민영화는 곧 망국의 징조다. 올바른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그 시작은 채널재배치라는 이벤트에서 촉발되었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전시회 무료
-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2013 가을

디지털 방송 컨퍼런스

방송, 미래를 열다

‘2013 가을 디지털 방송 컨퍼런스’는 매년 11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2006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8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 컨퍼런스에서는 올해의 방송기술 관련 이슈를 정리하고 방송의 미래 방향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방송,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증강 현실과 방송, UHDTV 현황, 빅데이터 핵심기술과 같은 최신 방송통신기반 기술과 ‘차세대 UHDTV 방송과 700MHz’에 관한 토론회 등 국내외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명 강의를 제공합니다.

일시 2013년 11월 6일(수) ~ 7일(목)

장소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주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교육원

후원 방송인총연합회, 한국방송협회, DTV KOREA, 미래방송연구회

- 사전등록 www.kobeta.com(공지사항 참조)
사전등록자 무료(자료집 포함)
- 2013년 11월 4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이메일 kobeta@naver.com
- 중식제공은 없습니다
- 사전등록자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Day 1.
11/6(수)

시간	발표 주제	강사
09:30~10:00	사전등록 명단 확인, 현장등록	
10:00~10:10	개회사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10:10~10:20	Keynote	
10:30~11:30	증강 현실과 방송 - 어떻게 할 것인가?	송주호 EBS 교육방송연구소 선임연구원
11:30~12:30	오디오코덱의 발전과 디지털라디오	안영기 CBS 디지털기술국 국장
12:30~13:20	점심 식사	
13:20~14:20	New MIROS-라디오 Tapess 제작/송출 시스템	이상규 MBC 기술연구소 차장
14:20~15:20	스마트 단말기, 스마트 플랫폼	이상술 콘텐츠연합플랫폼(주) 이사
15:20~15:30	Coffee Break	
15:30~16:30	구글TV 서비스 현황	구글코리아
16:30~17:30	세컨드 스크린의 현재와 미래	이재호 KBS 기술연구소 차장

Day 2.
11/7(목)

시간	발표 주제	강사
09:30~10:30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방송 제작 시스템	임종근 SBS TV기술팀
10:30~11:30	AVID의 클라우드 기반 편집 솔루션	한국아비드
11:30~12:30	빅데이터 기술과 비정형 영상데이터 분석	박종열 ETRI 분석SW연구실 실장
12:30~13:20	점심 식사	
13:20~14:20	HEVC 기술 & 서비스 개발 현황	류성걸 Pixtree 본부장
14:20~15:20	UHDTV 개발 & 보급 현황	김병노 LG전자 수석
15:20~15:30	Coffee Break	
15:30~17:30	토론회 : 차세대 UHDTV 방송과 700MHz	사회 :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